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시늉만’...단속은 ‘팔짱만’

광주 헬스장·수영장 등 가격·환불기준 명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0건’ 방문상담 후 가격 결정 유도...시행 300일인데 실패 파악 안돼 시민 불편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발한데도 제도기간이 종료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단속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다.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 안착을 위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공정위는 시행 300일이 지나도록 체육시설의 정확한 실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책의 실효성은 없고 시민들의 불편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제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광주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치고 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 및 환불 기준을 표시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가격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 간에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시설 내 고지 의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은 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종이에 출력해서 붙여놓거나 포스터, 게시판, 배너, 입간판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들의 경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제도기간을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새)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해 전국의 1003곳의 헬스장 중 400개의 헬스장에게 자율시정을 명령했다. 10곳 중 4곳이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2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광주 시내 헬스장 10곳 중 4곳만이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6개의 헬스장은 ‘프로모션’ 등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상담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10개 중 7개 헬스장이 PT(운동을 개인적으로 코치해주는 것)는 고객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 트레이너가 직접 보고 맞춤관리를 해야 한다며 방문상담 후 요금이 결정된다고 했다.

체육시설들이 이처럼 가격표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질수록 업계끼리 ‘제 살 깎아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PT나 개인 강습의 경우 트레이너별 개인별 전문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는 이유도 있다.

결국 불편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휴학 후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장호영(21·광주시 광산구) 씨는 등록 2주 뒤 방문청으로부터 징집소집통지서를 받아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20%만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장씨는 “헬스장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환불규정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면서 “사정이 생겨서 환불하겠다고 하니 알아서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20%를 환불받으라는 답변만 내

났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필라테스에 관심이 생긴 허민아(여·25)씨는 2주가 넘도록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가격표시란에 가격이 없고 방문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허씨는 “인터넷 홍보글 가격만은 요금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있고 결국 직접 전화해보면 방문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다. 광주지역 수영장 5곳 중 2곳은 요금을 전화로는 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수영장 이용료는 쉽게 알려졌지만 강습료와 환불규정에 관해서는 방문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헬스장만 1만개가 넘고 체육시설도 정확히 파악이 어려울 만큼 광범위해서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나 사전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신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나주 실종 80대 할머니 12일만에 숨진 채 발견

나주에서 실종됐던 80대 할머니가 실종 신고 12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나주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께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인근 영산강변에서 A(여·87)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산책을 나간 뒤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실종 12일만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 가족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치매 증상에 따라 다리를 바퀴로 짚고 강에 다가가다가 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 아들은 경찰에 “A씨는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죽산보 건너편 친정집으로 자주 가고 싶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초등생도 쉽게 무면허 대여...키패드 사고 급증

광주·전남 올 367명 무면허 적발

운전면허가 없는 초·중·고교생이 전동 키패드를 불법 대여·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공동주택 옆 거리에서 A(12)군과 B(11)양이 함께 전동 키패드를 타고가다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학생 모두 면허 없이 전동 키패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13세 미만이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동 키패드 앱 회원가입 당시 ‘운전면허증 다음에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해 면허증 없이도 키패드를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에는 고등학교생 C(16)양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전동 키패드를 운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사고 경위와 별개로 C양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

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대여 시 면허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단속이 미비해 여전히 초등학생도 쉽게 불법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시 동구)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대여업체 중 16곳에서 여전히 면허 확인 없이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조차 없어 업체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속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시 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미성년자 197명이 무면허로 전동 키패드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5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42명의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 기준 11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을 한달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관내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안내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미끄러진 본인 트럭에 치여 숨져

경사도에 화물차를 중립으로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70대 남성이 본인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강진경찰과 강진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강진군 도암면 편도 1차선 도로 근방 논두렁에서 A(79)씨가 1t트럭에 깔려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CCTV등을 통해 확인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사고 지점에 주차 후 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돈 잃자 도박사이트 계좌 정지시키려 공문서 위조 ‘징역형’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려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해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제주의 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위조된 확인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

주의 한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후 이를 빌미로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위험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정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